

“역내 경쟁당국 리더로서의 위상 굳건히 하고, 국제무대에서 적극적 역할 수행에 크게 기여했던 포럼”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장
김 대 영

Q 이번 제7차 서울국제경쟁포럼의 성과라면 무엇일까요? 이번 포럼이 프로그램 구성 등에 있어서 과거에 개최됐던 포럼과 구별되는 점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A. 우선 제7차 서울국제경쟁포럼은 공정거래제도 도입 31주년이 되는 해에 개최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그간의 풍부한 집행역사를 바탕으로 한층 제고된 공정위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경쟁당국이 주관하는 경쟁법 분야 전문 국제회의 중에서 ‘베를린 국제경쟁컨퍼런스’와 함께 세계적 영향력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포럼의 특징은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외국 참가자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서도, 내수경제 활성화라는 범정부시책에도 부응하는 간접적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럼 개최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우크라이나, 터키 등의 경쟁당국 책임자간 양자회담을 개최해, 향후 기술지원과 법집행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당국간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16회 국제경쟁정책워크숍’과의 연계 개최를 통해 전 세계 경쟁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교류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었다는 점도 주요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이번 포럼의 테마와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 중요시 했었던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A. 이번 포럼의 프로그램 선정은 공정위의 다양한 업무영역과 전통 경쟁정책 분야를 간접적으로 접목함으로써, 경쟁당국이자 공정거래당국 나아가 소비자정책당국으로서의 공정위의 위상을 알려나가고,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선점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제1세션의 주제인 ‘최근 국제적 경쟁법 집행의 성과 및 시사점’에서는, ‘자본주의 4.0’ 등 현재 세계경

제의 주류 운용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법의 전통 논리라고 할 수 있는 ‘경쟁자 보호보다는 경쟁 보호’의 타당성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두 가지 가치의 조화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부당한 훼손을 방지하고 기업네트워크의 건전한 생태계 발전을 위해 공정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정책의 취지와 성과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해보았습니다.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조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제2세션은, 소비환경의 급변에 따라 두 가지 정책간 발생할 수 있는 마찰관계를 예측하고 대응하면서, 경쟁과 소비자정책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컨슈머’ (Smart Consumer) 등 소비자정보 제공을 통해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경쟁압력을 제고하는 공정위의 최근 정책을 소개하는 동시에, 각국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장(場)으로 활용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식재산권과 경쟁법과의 관계를 다룬 제3세션은, 최근 애플과 삼성 간의 특허권 분쟁과 관련해 각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 조화 가능성을 살펴보는 기회로 구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통 경쟁법을 토론하는 OECD 등 국제기구 주관의 국제회의의 틀에서 벗어나, 공정위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점해 논의를 주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Q 포럼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감지할 수 있었던 각국의 경쟁법 정책 및 집행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이번 포럼은 전 세계 경쟁법 집행당국 및 경쟁법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최근의 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식을 공유했었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점차 상시화 되어 가는 경제위기 속에서 경쟁법·정책의 집행효과가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소비자 후생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즉, 다양한 경제·사회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협의의 경제적 효율성을 뛰어넘어서는,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해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경쟁정책을 보완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련 정책과의 유기적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문제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Q 포럼에 참석했던 해외 전문가들에게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행사장 외에서 나누었던 경쟁 관련 논제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을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A. 삼성과 애플의 특허 관련 분쟁이 전 세계 IT 업계와 경쟁정책 분야의 최고 관심사로 떠오르

고 있다는 시기상 중요성을 반영하듯이, 특허권 남용과 경쟁법 적용 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언론계에서는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의 경쟁당국자와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가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미국 반독점 분야의 권위기관인 반독점 연구소(American Antitrust Institute)의 앨버트 포어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시장경쟁을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고, 미국내 기업들의 혁신을 저해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이번 논란에 대해 객관적이고 다양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법률자문관인 윌라드 톰 역시 “미국내 경쟁당국과 법조계도 특허권 남용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미국 경쟁당국의 집행방향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국내에서 큰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논점도 장외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최근 경제민주화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담합 등의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공정위에 부여된 전속고발제의 폐지 여부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의 토시유키 남부 국제심의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쟁당국의 전문성, 효율성, 객관성을 위해 전속고발제가 필요하고, 일본의 경우는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 한국과 가장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내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봅니다.

Q 제7차 서울국제경쟁포럼에 비해 제16회 국제경쟁정책워크숍은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은 느낌입니다. 워크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총평해주세요.

A. 포럼과 워크숍은 성격을 달리해서 각 회의의 취지가 극대화되도록 기획했습니다. 포럼이 당국자, 법률가, 학자, 재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주제에 대한 담론을 논의했다면, 워크숍은 실제 정책을 설계하고 법을 집행하는 각 경쟁당국의 과장급 인원들이 참석해 보다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3개의 주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우선 다자 경쟁규범을 대체하는 FTA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양자간 또는 지역 내에서 체결되는 구속력을 가진 FTA 내 경쟁챕터를 다자틀 내에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국가자본주의’의 부상 등을 배경으로 최근 경제정책 관련 국제회의에서 빈번히 논의되고 있는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이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가, 최근 영미법계 제도인 동의를결제가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각국의 경쟁법에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다른 법률체계와의 조화를 유지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참가자간 활발한 발표와 참여가 있었습니다. 워크숍은 그 성격상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포럼에 비해 규모는 작았지만, 포럼에 발표자로 참석한 OECD의 존 데이비스, 미국 법무부의 존 리드,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마르쿠스 바게만 한국 OECD정책센터 관계자들을 비롯해 나미비아, 우즈베키스탄 등 개도국 공무원들이 참여해 각자의 경험과 시사점을 공유하는 등 내실에 있어서는 포럼에 못지않은 성과가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 워크숍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각종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UN 산하 UNCTAD와 기획단계에서부터 행사 진행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 동향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토론에 반영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Q 포럼과 워크숍을 마친 후에 아쉬웠던 부분이나, 추후 개최될 포럼과 워크숍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A. 이번 포럼과 워크숍은 원활한 행사진행과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져 기본 취지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구성과 진행방식에 있어서는 보다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회의 구성에 있어서 몇 개의 대(大)주제 하에 소(小)주제를 설정하고, 각 소주제에 대한 복수의 분임토론(Breakout Session)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보다 능동적인 참여가 유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법·경제학 관련 학회를 비롯해 산업별 협회 차원의 세미나 등과 연계 개최한다면, 각계의 시각을 풍성하게 반영하고 논의의 질을 제고하면서 다양성으로부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진행방식에 있어서는 경쟁법 관련 국제회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미주나 유럽 등으로부터 단기 국제회의의 참석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점을 감안해서, 최근 세미나 개최비용과 시·공간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그 활용도가 확산되고 있는 웨비나(Webinar; Web+Seminar) 형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직 합니다.

Q 끝으로 포럼과 관련해 첨언해 주신다면...

A. 서울국제경쟁포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마다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 행사로, 국내 경쟁법 커뮤니티와 세계적 논의를 주도하는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고위급 책임자들 간에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교류하는 장입니다. 지난 12년여 간의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포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내 경쟁당국 리더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국제무대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멀리 부산까지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